



5·18 구 묘역의 추석맞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15일 오전 광주 북구청 '청년간부회의' 위원 20여명이 운정동 5·18 구 묘역에서 벌초와 묘비단기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과감하고 감동적인 대북 쌀지원을”

박지원 원내대표,李大統領 통 큰 결단 촉구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사진)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으로 40만~50만 규모의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쌀 5000t을 전달하기로 한 데 대해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대북정책에 철학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 큰 결정을 기대했는데 쌀 5000t으로 생색만 내려해선 안된다”며 “이제 과감하고 감동적인 쌀 지원으로 이산가족상봉 정례회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적극적 대북정책으로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민족에게 주는 가장 값진 추석 선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쌀 5천t을 전달하기로 한 데 대해 “그 정도의 양은 너무 적다”며 “5만t 이내의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에서 “이명박 정부들이 처음으로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의 물꼬를 트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10만t은 문제가 있느냐 5만t 이내의 수준은 돼야 한다”며 “다만 쌀이 균등으로 전용되는 증거가 하나라도 나타나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단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쌀 1~2만t, 옥수수 3~4만t으로 나눠서 지원하면 군량미 전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시민공청회

“광주 브랜드 높이고 경제 도움”

주상절리대 등 국가차원 보존 대상 사유지 매입·군부대 이전 선결과제

광주의 진산(鎭山)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국비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공원 관리, 고품격 관광서비스로 인한 방문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정상에 위치한 군부대와 통신시설의 이전, 전체 면적의 67%에 달하는 사유지 매입 대책 등 선결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오후 광주 서구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국립공원 지정 신청 후 환경부에서 개최하는 공식 공청회와는 별도로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승필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는

조정차장은 “무등산은 가치나 정서적 의미가 크며 지정요건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승격을 기대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국립공원 관리는 ▲보전과 이용의 조화 ▲사유재산 보호대책 ▲주민과 함께 하는 공원관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등 4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며 “국립공원 지정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공청회 자체가 국립공원 추진을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 같아 우려가 된다”며 “국립공원 지정은 광주의 종합적인 발전기치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무등산 정상에 군부대 및 통신시설의 이전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여환 늘푸른화산협회 사무국장은 “규방암~화산 등산로 정비 등 광주·화산·담양이 함께 민족화

“北 천안함 사과해야 대규모 지원 가능”

김태호 청와대 비서관 “정상회담 관련 접촉 없어”

청와대가 쌀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은 천안함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은 천안함 사과가 전제돼야 하고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전쟁기념관에서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최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남북교섭이 가능하려면 북한의 천안함 문제

인정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십만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천안함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6자회담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그랜드배겐’에 북한이 응하느냐에 달렸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천안함 이후 지금까지 정상회담은 전제로 한 남북 접촉은 없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교섭을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전향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도 변화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특히 “북한이 이산가족 회동을 제안하고 인도적 지원을 의제 의하고 남북간 추가적 면담이 필요하다”고 제의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비핵화나 천안함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수해지원 등) 인도적 협력으로 천안함과 핵 문제가 풀리다고 생각하면 논리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北수해 첫 지원... 밀가루 400t 오늘 북송 한국노총 北 쌀지원 추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한국JTS가 오는 16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의 수해를 돕기 위한 밀가루 400t을 전달한다. 이번 밀가루 전달은 북한의 수해 발생 이후 민간차원의 첫 지원으로, 인도 인수를 위해 대표단도 개성을 방문할 계획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는 15일 “이번 첫 수해지원이 심각한 수해피해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대북 긴급 수해 지원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도 같은 날 밀가루 130t을 북한의 수해 지원을 위해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밀가루 530t이 16일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대북 수해지원 물자로는 처음으로 북한에 전달된다. 이는 약 2억9000만원 상당으로 25t 트럭 24대에 나눠 실려 개성시와 황해남도 배천군 지역에 분배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모두 5개 단체가 신청한 8건의 수해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으며, 지원규모는 쌀 203t을 비롯해 옥수수과 밀가루, 라면 등 모두 22억4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육로를 통해 북한에 쌀을 지원할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최근 북한직업총동맹(직총)이 우리 단체의 수해복구 지원 방안에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온 만큼 추석 이후에 육로를 통해 북측에 쌀 100t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노총은 지난 7일 직총에 팩스 전문을 보내 쌀 지원의사를 전달 바 있다. 당시 노총은 “지난달 큰물(홍수)과 태풍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많은 북한 동포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쌀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니 우리의 정성이 피해복구와 정상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회신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수 시	정 시	계
인 문	신 학 과	25	25	5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2	5
사 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2	8	20
사 범	유 아 교육 과	10	10	20
예 능	음 악 학 과	13	12	25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플루트, 지휘, 오르간, 작곡, 실용음악, 교회음악)			
	총 계	63	57	120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100% 인터넷 접수

전형일정

수시모집 원서접수 : 2010. 9. 15(수) ~ 10. 1(금)

정시모집('가'군) 원서접수 : 2010. 12. 17(금) ~ 22(수)

특별전형(정시모집 제외)

- 신학과 : 교역자, 목회자사모, 교회봉사자, 교역자재, 국가(독립)유공자(선)자녀 전형
- 유아교육과 : 가정주부 전형

장학제도 매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가족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자기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민족도장학금 등 지급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봉촌동 산 70번지

■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는 56년의 기독교명문대학입니다.

가정이 두루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뢰을 말씀은 9월 7일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한도가 제한>되는 대학을 발표하면서 우리 광신대학교를 그 가운데 한 대학교로 거명하여 우리 대학교가 사실과 달리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우리 대학교는 재정건정성이 우수한 특실한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1954년 설립되어 올해로 개교 56년 된 기독교대학교입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에 수많은 성직자와 봉사자를 배출해 왔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하는 것처럼 부실한 대학교가 아닙니다. 우리 대학교는 현재까지 수익용기본재산을 100%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수년째 교원보육을 역시 100%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장학금지급을 역시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특실한 대학입니다.
- 2. 대출제한대학의 선정 평가기준의 공정성이 결여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대학은 정보공시제도를 통해 대학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이 공개자료를 통해 정부는 물론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대학을 속속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대출제한대학 선정기준으로 사용된 지표는 100여개의 정보공시항목 중 약 9개의 항목만을 가지고 평가했으며, 그나마 9개 항목간의 배점도 최고 7배나 차이(최소5%반영, 최고 35%반영)를 두는 등 평가 기준의 공정성이 없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은 2010년 현재의 자료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2008년도의 자료 등 과거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되어 어떠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 3. 지방대학과 소규모 특성화대학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학들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몸집을 줄이는 등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 항목으로 선택된 9개 항목 중 비수도권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대학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재학생총원율'을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35%나 반영하였고, 역시 수도권대학에 비해 불리한 '취업률'을 20% 반영하면서, 현재 대규모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전임교원보육률'은 5%밖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장학금지급률' 역시 5%밖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지난 7월 7일 밤 9시 TV뉴스에서 보도된 것처럼, 교육부가 30개 대학교들이 이의서를 제출할 경우 다시 조정할 뜻을 보도하였고, 실제로 지난 9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대학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전면 재평가하여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이의서를 제출하여 투명하고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번 일련의 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 광신대학교에 보다 더 좋은 미래를 주시길 위한 시련이라 생각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광신대학교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16일
광신대학교 교직원일동